

11

버려야 할 관행, 지켜야 할 원칙

뉴스 기사는 저널리즘의 현실을 스스로 말한다. 시민의 신뢰가 추락하는데도 기사의 품질이 제자리걸음 하는 이면에는 잘못된 취재 보도 관행이 공고히 자리 잡고 있다. 시급히 바뀌어야 할 대표적 관행을 짚어보고 올바른 보도 원칙을 제시한다. 이 기획은 저널리즘 품질 향상을 고민하는 '좋은저널리즘연구회' 회원들이 돌아가며 집필한다.

조국 정국과 여론조사 보도

경마식 보도 버리고 여론 추세 짚는 보도 지향해야



김경모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여론은 민주정치 과정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다. 여론 조사는 과학적 조사 방법을 사용해 여론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그러나 무형의 여론을 가시화하는 일상의 통로는 여론조사 보도다. 여론조사 보도를 통해 민의가 무엇이고 그 향방이 어디를 향하는지 확인할 수 있고, 또 이를 정치 과정으로 되먹임한다. 여론조사 보도는 저널리스트와 정치 엘리트, 그리고 시민이 모두 중요하게 여기고 주목도가 높은 정치 정보다.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처럼 조국 사태는 지난 2~3개월 동안 정치 논란의 중심을 차지했다. 엄청난 분량의 뉴스가 쏟아졌다. 이례적일 만큼 넘쳐난 여론조사 보도도 여기에 포함된다. 선거 여론조사 보도의 오남용과 기사 품질은 이미 상당수 연구와 글을 통해 지적된 바 있다. 문제는 이번 사태를 둘러싼 여론조사 보도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고스란히 반복되

고 있다는 점이다.

표본조사는 산출한 통계량(statistic)으로 모집단의 상응하는 모수(parameter)를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추정 모수는 확률(신뢰수준)로 정의되고 구간(신뢰구간/오차범위)으로 표현된다. 여론조사도 표본조사라는 점에서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른바 조국 정국과 관련한 여론조사 기사를 접하다보면 조사의 결과지표를 구간(interval) 개념이 아니라 점(point)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는다. 점으로서 수치의 변동에 집착하면서 실제 일어나지 않은 단기 변화를 과도하게 해석하려는 기사와 자주 마주치기 때문이다. 선거철 마냥 이번에도 조사지표(지지율, 선호도, 찬반 비율 등)의 추세 변화에 주목하는 기사가 유난히 눈에 띄었다. 그러나 시점을 달리하는 조사 결과를 일정한 넓이(오차범위)를 지닌 띠 모양의 구간이 아니라 점의 이동으로 보면서 결과를 해석하기 때문에 빈번하게 관찰되는 유형의 해석 오류가 여전했다.

오인 소지가 있는 오류 기사 양산

예를 들어, 오차범위 안의 미미한 지표 변화에 불과한데도 지난번 대비 이번 조사에서 얼마가 ‘올랐다’ 또는 ‘내렸다’는 식으로 마치 변동이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표현한다. 지표 변동을 다루는 방식도 주식시세를 알리는 기사를 보는 듯하다. ‘하락세를 마감하고 반등’, ‘상승세에 제동’ 같은 표현이 거리낌 없이 등장한다. 조사 시점 근처의 특정 사건과 이슈의 발생이 그런 지표 변동의 직접 원인인 것처럼 인과 해석하는데 부주의한 경우도 다반사다. 심히 우려되는 지점은 조사 결과의 의미를 정치적 이해관계가 뚜렷한 정당 관계자와 정치인의 입을 빌려 해석하는 경우다. 자기 좋은 쪽으로 수치를 자의적이고 정략적으로 호도하도록 내버려 두는 무책임한 보도 사례다. 여론조사 추세 보도에서 여러 조사회사의 자료를 하나의 시계열로 통합해 보여주는 방식도 조심해야 할 사안이 많다. 조사 방법(표본 크기, 표본 구성비, 질문 문항, 질문 순서, 오차 보정 등)이 서로 달라 지표의 의미를 동일선상에 놓고 단순 비교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지지율을 묻는 동일 질문이라도 응답의 선택지 구성이 엄연히 서로 다른 조사의 결과를 같이 비교하는 것도 문제 있던 마찬가지다. 특정 질문의 주요 응답만큼 비중이 높은데도 모름과 무응답 항목을 적절한 설명 없이 한데 묶은 수치를 보여주거나, 질문 항목의 응답 순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은 결과까지 관행적으로 ‘~ 순 이었다’, ‘~가(이) 뒤를 이었다’는 식의 순위 표현을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 모두 조사 방법이 요청하는 통계 기준에서 보자면 하나 같이 오류를 담고 있는 기사들이다. 조사 수치가 그 자체로 객관적 사실이자 실제 차이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여론조사의 수치가
별다른 변화도 없이 미미한 결과를 보여준다면
아마도 뉴스 가치가 없고 독자와 시청자의
주목도도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조사의 결과지표를 구간 개념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의 표현에 주의한다면 오류 기사
작성은 최소화할 수 있다.

”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여론조사의 수치가 별다른 변화도 없이 미미한 결과를 보여준다면 아마도 뉴스 가치가 없고 독자와 시청자의 주목도도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조사의 결과지표를 구간 개념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의 표현에 주의한다면 위와 같은 오류 기사 작성은 최소화할 수 있다. 조사마다 추출되는 표본이 다르므로 통계치는 조사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조사 때마다 표본구성비 역시 다르므로 추세 분석은 물론 하위표본 분석 역시 그 차이를 감안해야 한다. 표본구성비를 고려한 가중치 부여를 통해 통계수치를 보정해야 하는 것이다. 성, 연령, 지역(권역)은 인구센서스 자료를 토대로 표본구성비를 대조할 수 있어 보정이 용이하다. 조사회사도 보정 지표를 제공한다. 반면, 정당 지지층, 정치성향 같은 변수는 표본구성비에 대한 기준이 따로 없어 오차 보정이 쉽지 않다. 따라서 계층집단 간 차이가 진짜 차이인지, 추세가 실제 변화를 반영한 것인지, 기사만 봐선 정확하게 판단 내리기 어려운 때가 많다. 여론조사의 랜덤 표본이 충분한 크기라면 하위표본의 구성비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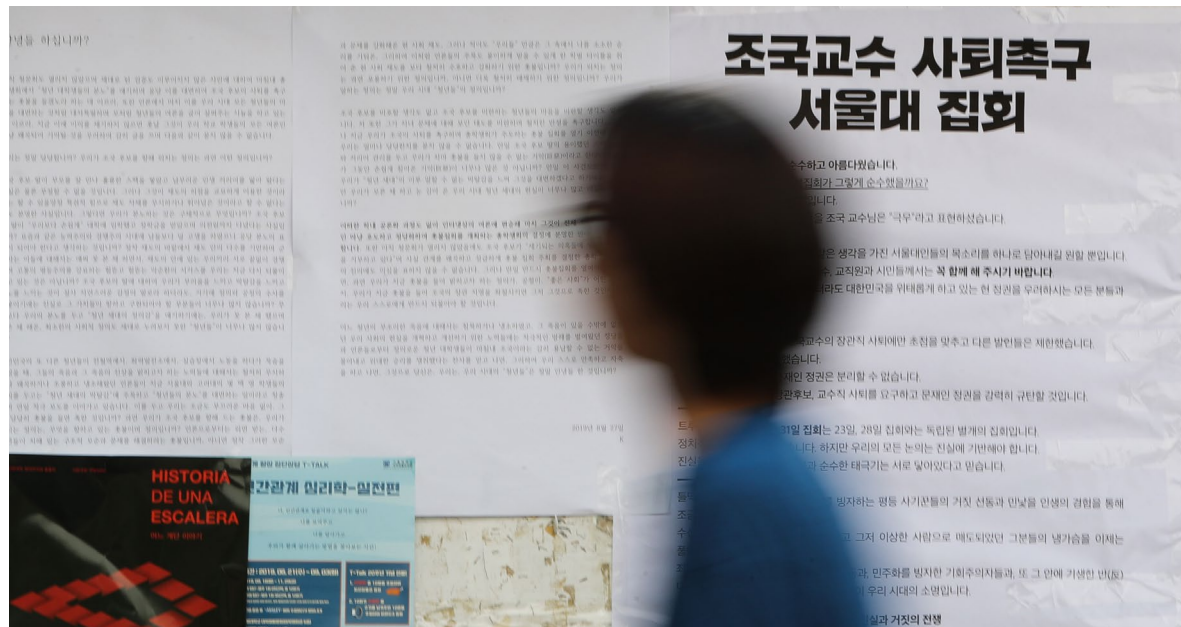
하지만 대부분 조사는 인구비례할당에 따른 다단계 군집이나 무작위생성 표집들의 임의전화걸기방식(RDD, Random Digital Dialing)으로 표본을 추출한다. 유무선 비중의 기준이 딱히 정해진 바 없고, 응답률이 높은 편도 아니다. 확률 표본 원칙을 따르는 랜덤 표본의 필요충분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진 현실은 아니라는 것이다.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하위표본 분석은 적절한 보정 작업을 거치는 것이 안전하다. 가령, 정치 성향이나 정당 지지층별로 대통령 국정수행 지도도, 장관 임명 찬반 또는 검찰 수사 정당성에 대한 의견 분포를 비교하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여러 계층으로 나뉘지는 하위표본의 오차한계는 전체 표본과 다를 수밖에 없다. 하위표본 구성은 조사마다 다르고, 또 가중치 부여를 통한 지표 보정이 가능한 변수와 그렇지 않은 변수가 각각이다. 문제는 보

정 확인이 어려운 변수의 계층 간 결과를 비교하면서 전체 표본의 표본오차에 해석을 기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기사가 많다는 점이다. 전국 단위의 전체표본이 500명 정도인 조사의 결과를 인용한 보도라면 이 문제를 피해가기 어렵다. 정치 성향 집단, 특히 중도층의 민심 변화에 주목했던 여러 기사 역시 표본오차 보정에 따라 조심스럽게 결과 수치를 해석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정치 현실을 재구성하는 여론조사 보도

조국 정국 내내 여론조사 보도는 대통령 국정수행 지도도 하락과 여야의 정당 지지율 격차 변화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 장관 임명 찬반 의견과 함께 유독 대통령 지지도와 정당 지지율 변화에 기사가 집중됐던

지난 8월 28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각종 의혹을 규탄하며 서울대학교 총학생회가 집회를 열겠다고 밝히자, 더 큰 사회적 모순은 외면한 채 '선택적 정의'를 외치고 있다는 비판 대자보가 붙었다. ©뉴스1



“

장관 조기 사퇴라는 지점에서 되돌아보면
보도의 누적 효과는 컸다. 하지만 그저
그런 품질의 여론조사 보도 양산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했다. 대다수 기사는
조사회사가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항목의
응답 결과를 넘겨받아 전략적으로 활용한
유형이었다.

”

현상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조사회사가 일일·주간 단위로 발표하는 지지율 변동은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추세를 가늠할 유용한 자료다. 다만 오차범위 안을 맴도는 단기간의 수치 변화는 사실상 큰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다. 그럼에도 대다수 보도는 사태와 맞물린 이슈와 사건이 수치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연관성을 찾고 의미를 끼워 맞추느라 바빴다. 이렇게 변화가 미미한 한두 주 정도의 단기 변동 자료를 매번 조국 사태와 연결해 기사화하는 짧은 호흡의 보도 관행에선 어떤 집단적 의도가 감지된다. 여론조사 보도라는 창구를 빌려 ‘민심 이반’과 ‘국론 분열’을 현저하게 부각시킴으로써 청와대와 정치권에 모종의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메시지를 설 새 없이 던지는 것이다. 사실이나 칼럼, 논평 같은 의견 기사와는 또 다른 차원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사태 동안 이들이 멀다 하고 여론조사 보도가 넘쳐난 현상을 달리 설명하기 어렵다.

장관 조기 사퇴라는 지점에서 되돌아보면 보도의 누적 효과는 컸다. 하지만 그저 그런 품질의 여론조사 보도 양산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했다. 대다수 기사

는 조사회사가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항목의 응답 결과를 넘겨받아 전략적으로 활용한 유형이었다. 쟁점과 관련해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질문을 만들고, 창의적으로 개발한 문항을 연관 변수와 교차 분석한 색다른 기사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천편일률적인 기사 형식으로 유사 지표의 변동에만 프레임을 맞추는 좁은 시야에 갇힌 채 방법론 오류조차 비슷하게 반복되는 패턴도 매체를 가릴 것 없었다. 좀 심한 말 같지만, ‘지지율 하락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는 대선 득표율에 얼마나 빨리 도달하나’, ‘여야의 지지율 격차가 언제 역전되나’ 서로 앞 다투어 보도한 또 하나의 경마보도 관행을 목격한 것 말고, 시민들은 이번 사태의 여론조사 보도에서 어떤 유용한 여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을까?

과학적 조사로 산출한 객관적 수치를 보여주므로 여론조사 기사는 사안을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여론조사 보도는 정치 현실을 재구성한다. 같은 조사 결과라도 수치 해석이 달라지면 현실의 정치적 의미도 달라지는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또 다른 정국에서 또 다른 쟁점이 회오리치면 지지율 등락에 주목하는 여론조사 보도가 또다시 넘쳐날 가능성이 크다. ‘정과 해쳐모여’를 점치고, 중간평가 프레임과 정치공학 관점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해석하는 관행도 이어질 것이다. 식견 풍부한 시민(informed citizen)의 양성을 지향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복돋기보다, 정치권을 쳐다보고 언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픈 쪽으로 여론조사 보도가 도구화하거나 의도와 상관없이 되레 정쟁을 부추기는 문제는 차분하게 성찰하고 가야 할 것 같다. ■